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전략구도

조민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핵은 무조건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한 김정일과 그의 핵심 참모들의 일치된 사고틀이다. ‘핵보유로 기놓고 보자’는 입장이 북한 핵전략의 기본 방침이다. 북한은 제2차 핵실험(5.25)을 강행함으로써 핵탄두 보유 의지를 아낌없이 과시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4.5)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대해 ‘사죄와 철회’를 주장했다(4.29). 더욱이 그러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박했으며, 이를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평양의 게임

핵무기 체계 완성과 미사일 장착의 핵탄두 보유국으로 가는 길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 방침은 결코 어제 오늘 사이에 불쑥 나타난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방침은 미국 행정부의 교체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도 없으며, 협상에 의한 근본전략의 포기를 기대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평양은 새로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확정된 전략 노선에 따라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즉, 국제사회의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 웨이’ 노선을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금년 초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한편, ‘핵군축’을 주장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와와의 비핵화 협상 방향의 일단을 제시하였다(1.13). 그 며칠 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대가로 핵포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비웃었다(1.17).

핵공학은 실험공학으로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위력과 성능은 개선된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핵보유국의 지위로 격상된다면, 정치적 논쟁의 차원에 그친 제1차 핵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이에 조선중앙통신사는 핵실험 후 즉각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이라는 제하의 보도문을 통해,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었고,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이제 북한의 핵전략은 명료해졌다. 이미 개발한 핵은 포기할 수 없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 경우 대미 협상과정에서 파키스탄 또는 인도식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파키스탄은 미국이 비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도는 핵보유국에다 미국으로부터 민수용 경수로까지 제

공받았다. 최근 북한은 미국이 악화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담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조선신보 5.23). 이는 북한의 일관된 주장으로, 결국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북한 핵보유 인정은 NPT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계’의 추진 전략과도 전면 배치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 인정 거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핵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쉽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1차 핵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취했던 북핵 포기에 대한 결연한 의지나, 전략적 대응 태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오히려 대북정책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활용하여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을 강행하였다.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전략적 위상을 짚어보자. 중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에 대해 ‘결연히 반대’라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외교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에게 악몽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의 안보위기 의식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의존도를 한층 강화시키게 된다. 여기에서 핵보유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다면 중국의 대북관리 전략이 한층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중국에게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세계대국이 끌려 다니는 형국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의 동북아 전략구도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북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결연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으며, 핵실험으로 잃을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보다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말하자면 일본에게 북한 핵실험은 우려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심각한 골칫거리도 아닐 수 있다. 일본의 강경한 발언과 태도는 북한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더 크다. 미국이 부득불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면, 일본은 ‘아쉬울 것 없다’는 입장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으로 한국은 ‘답답하기만’ 하고, 중국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여긴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분석을 제기하면서 은근히 미국 책임론을 환기시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북한에게 러시아는 중국보다 편한 상대이고, 러시아는 북한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교두보를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진실게임

첫째, 북한의 핵전략에서 남북관계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관계와는 큰 상관이 없다. 북한은 핵전략을 체제보장 차원의 대미전략 카드로 접근할 뿐, 남북관계와의 연계 속에서 접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 또는 경색국면이 북핵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바람직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시각은 이념적인 편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문제와 북한내부 논리로 인한 남북 경색국면을 남한 탓으로 돌려 남남갈등을 획책하려는 대남전략을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는다.

둘째, 북한 핵실험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무관심과 북미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실망에 따른 반발이라는 분석은 단견에 불과하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그릇된 시각은 북한 핵전략의 고유한 논리와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신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상을 제의해왔더라도 북한의 핵보유 전략을 포기시키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북한은 교묘한 수사와 대응 논리로 지지부진한 협상 전술을 구사했을 것이다. 협상의 출발점 즉, 부시 행정부가 떠난 지점인 ‘검증’ 문제에서부터 북미협상은 걸들게 된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무대응 상황이야말로 북한의 ‘전략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셋째, 핵실험은 북한의 후계자 구도와도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후계자 구도 확립 문제로 “시간에 쫓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주목을 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체제는 김정일의 유고 상황이라도 핵보유 전략을 그들의 스케줄대로 밀어붙여야 한다. 그 길만이 통치 엘리트의 결집체인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카니즘 속에서 경제 논리는 부차적인 사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 문제나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는 분명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는 예상된 채찍이지만 김정일과 그의 패밀리인 북한 통치 엘리트의 식탁 메뉴를 바꾸지는 못한다. 인민의 삶과 생존양식은 국가체제 밖에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라는 국가의 존재이유(raison d'être)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한은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 과학기술적 문제와 실무적 준비상태가 완료되면 핵보유 코스로 무조건 돌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북핵 문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의 전략적 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이제 다시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6자회담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다는 혐의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알리바이가 입증되기는 힘들다.

중국의 대북 억제는 의지와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지, 중국의 역량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단둥과 신의주 사이의 파이프 밸브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고, 북한 대외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의존도



의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이 세계로 나가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통로인데, 이 통로를 까다롭게 하면 북한은 당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국에게는 효율적인 대북 억제 카드가 얼마든지 있다. 그와 달리 미국으로서는 대북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옵션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북한은 미국의 정치적 양보와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을 더 이상 두려운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반면, 북한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여긴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동북아 지역의 핵지형(核地形)이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핵 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는 말이다. 이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만이 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으로 판명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핵지형의 유동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세계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중국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는 무척 중요하다. 특히,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공조체제는 북한의 오관을 불식시키는 한편,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진지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아주 크다. 그와 더불어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

